

#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3
----------	------

발의년월일 : 2012. 12. 17.

발 의 자 : 김영철·김동규·김동수·김철진·나정숙·  
박영근·성준모·송두영·신성철·윤미라·  
전준호·정승현·정진교·한갑수·황효진의원(15인)

## 1. 주 문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 입점하는 신규점포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형마트 및 SSM의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 입점하는 신규점포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을 반대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3. 덧붙임

-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

## 대형마트·SSM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

지난 1996년 정부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전통 재래시장 및 중소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는바, 그 이후 전국적으로 450여 개소가 넘는 대형마트가 개설되었으며,

월등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영세상인들의 생업기반인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진출시킴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7조 6천 억원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이상,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대폭 증가한 통계수치를 볼 때, 대형 유통회사가 몸집을 불리며 성장하는 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의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대로 피해해졌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 대형마트 9개소, SSM은 20여 개소가 넘게 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의

중소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부터 1 km 이내에 입점하는 신규점포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적 규제를 피해가며 영업형태를 끊임없이 탈바꿈해 가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피해를진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및 SSM의 확장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에 따른 영세 중소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지역자금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2년 12월 2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